



슬기로운 교사생활

복무/복지/교권/업무/학교운영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Q&A 60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슬기로운 교사생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슬기로운 교사생활

발 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발 행 일 2022년 10월 17일

발 행 인 김현석

기 획 서울지부 정책실

일러스트 황유리

전 화 02-523-1293

팩 스 02-523-1409

이 메 일 ktuseoul@gmail.com

즐거로운 교사생활

교사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복무/복지/교권/업무/학교운영
5개 영역의 Q&A 60개를 담았습니다.
2020 전교조서울지부-서울시교육청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 교육청의 지침 변경 등이 반영된
최신 교사생활 안내서입니다.
선생님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전문

I. 복무

즐거로운 교사생활 Q&A

01. 조퇴를 신청하기 전에 메신저로 미리 알려달래요. 12
02. 조퇴사유에 개인용무는 안되나요? 13
03. 조퇴했다고 성과급 감점? 부당한 거 아닌가요? 14
04. 병가를 낼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5
05. 질병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16
06. 방학중 근무를 교사들 동의 없이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래요. 17
07. 수행평가검사·시험문제출제, 초과근무 사유가 안되나요? 18
08. 미처 기안을 못올리고 초과근무했는데 어찌죠? 19
09. 초과근무 2시간 신청하면 1시간은 왜 빼나요? 20
10. 초과근무 할 때 특근매식비 신청할 수 있나요? 21
11. 사전답사 출장 시 초과수당은 못 받나요? 22
12. 결보강비·초과수업비가 학교마다 다른데, 기준이 뭔가요? 23
13. 가족돌봄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가를 쓰라고 합니다. 24
14. 방학 때 국외여행을 가려는데 연가를 쓰라고 합니다. 26
15. 연가의 기타인정사유로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28
16. 연가/특별휴가 때 대체강사를 요구했더니 거절합니다.
이건 교육청 예산 아닌가요? 29

17. 학교를 잠시 벗어나 전문성을 신장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32
18. 번아웃된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34
19. 잠깐이라도 쉴 교사휴게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5
20. 교육활동 중 학생 사고 시, 교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36
21. 학생이 찬 공에 차가 파손됐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37
22.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나요? 38
23. 공무원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면데요? 40
24. 체육교사 피복비 지원이 매년 지급으로 바뀐 게 사실? 41
25. 신학년 준비연수에 참여하는 신규/복지교사는 열정페이? 42
26. 오늘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얼마 받나요? 43
27.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건가요? 44
28. 정년까지 일하면 공무원연금을 얼마 받나요? 46

III. 교권

즐거로운 교사생활 Q&A

- 29.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요. 50
- 30. 관리자가 폭언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갑질신고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51
- 31. '교사는 교장 명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52
- 32. 관리자가 복장을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3
- 33.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가요? 사례가 궁금해요. 54
- 34.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 35. 학생 가방에 녹음기가 있네요. 불법 아닌가요? 57
- 36.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시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8
- 37.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59
- 38. 졸업앨범에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은데 거부해도 되나요? 60
- 39. 제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61
- 40. 지문인식기 설치한다는데 지문등록을 안하고 싶어요. 62

41. 강사채용, 교사가 해야 하나요? 66
42. 강사 주휴수당 계산, 교사가 해야 하나요? 67
43. 학교시설물 관리, 교사가 해야 하나요? 68
44. 화장실 불법카메라 조사, 교사가 해야 하나요? 69
45. 교무행정지원사/교무실무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70
46.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을 학교장이 맘대로 뒤엎었어요. 72
47.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은 당연히 교감선생님? 73
48. 작은 학교인데, 부장교사 수를 줄일 순 없나요? 74
49. 학급운영비를 쓸 때마다 기안해야 하나요? 75
50. 학급운영비를 개산급처리하면 편하다던데, 이게 뭔가요? 76
51. 청소비품, 시계, 거울 등을 학급운영비에서 사라고 합니다. 77
52. 학년/부서/교과협의회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78
53. 기초학력진단, 꼭 표준화도구로 해야 하나요? 79
54. 복수감독제, 꼭 해야 하나요? 80

V. 학교 운영

즐거로운 교사생활 Q&A

55. 교무회의에서 회의는 없고 업무 전달만 합니다.
문제 제기할 근거가 있을까요? 84
56. 교사 동의 없이 연구/시범학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86
57. 학생에게 교무실청소를 시키면 안된다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87
58. 학생 이름표를 탈부착형 대신 고정형(박음질)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88
59. 남학생 앞번호/여학생 뒷번호,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89
60. 학생용의복장 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0

즐거로운 교사생활 Q&A

I. 복무

01. 조퇴를 신청하기 전에 메신저로 미리 알려달래요
02. 조퇴사유에 개인용무는 안되나요?
03. 조퇴했다고 성과급 감점? 부당한 거 아닌가요?
04. 병가를 낼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05. 질병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06. 방학중 근무를 교사들 동의 없이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래요.
07. 수행평가검사·시험문제출제, 초과근무 사유가 안되나요?
08. 미처 기안을 못올리고 초과근무했는데 어찌죠?
09. 초과근무 2시간 신청하면 1시간은 왜 빼나요?
10. 초과근무 할 때 특근매식비 신청할 수 있나요?
11. 사전답사 출장 시 초과수당은 못 받나요?
12. 결보강비·초과수업비가 학교마다 다른데, 기준이 뭔가요?
13. 가족돌봄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가를 쓰라고 합니다.
14. 방학 때 국외여행을 가려는데 연가를 쓰라고 합니다.
15. 연가의 기타인정사유로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16. 연가/특별휴가 때 대체강사를 요구했더니 거절합니다 .
이건 교육청 예산 아닌가요?



조퇴를 신청하기 전에 메신저로 미리 알려달래요.



부당한 처사입니다. ‘조퇴 신청 시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에 위배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을 반영한 교원 복무지침을 매학기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복무관련 안내 (2022.06.28.)

-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1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⑧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조퇴사유에 개인용무는 안되나요?



개인용무라고 쓰셔도 됩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전교조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확실한 지도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은 2022년 6월 공문을 시행할 때 ‘개인용무도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명기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복무관련 안내 (2022.06.28.)

- 조퇴, 외출, 지각을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되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개인용무도 가능)
- * 조퇴, 외출, 지각 관련 내용은 2022.3.1. 개정 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달라진 내용 없음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1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⑧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NEIS 결재를 받도록 하되, 별도의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조퇴했다고 성과급 감점? 부당한 거 아니가요?



네, 부당합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휴가 사용을 한 교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무 상황을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여 교사의 휴가권을 제약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2021년 3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도를 촉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3월 공문을 통해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2022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안내 (2022.03.11.)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안내

- 휴가(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를 다면평가(성과상여금 등) 평가지표나 감점요소로 활용하지 않도록 권고
-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 교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5.08.20.)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한 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병가를 낼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누계 6일(48시간)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4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알기 쉬운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73쪽)

-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질병휴직 시,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최초 질병휴직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서에 명기되는 치료 기간이 천차 만별이어서 휴직 기간 설정과 휴직 연장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병 휴직 연장 시에는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질병휴직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매뉴얼에 ‘질병휴직기간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한한다’는 명시된 문구가 없으므로**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실무매뉴얼 (181쪽)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발령 시 그 기간은 명시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상태는 계속되는 것임.



방학 중 근무를 교사 동의없이 무조건 돌아가면서 하세요



방학 중 강제적 근무조 운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복무지침에도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방학중 근무를 강요한다면 교육청 인사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전교조서울지부로 전화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 교원복무관련 안내 (2022.06.28.)

방학 중 강제적 근무조 운영은 금지하되, 코로나19 상황 대처 등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직원회의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15조 【교원의 업무 정상화】

⑭-2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



수행평가검사·시험문제출제, 초과근무 사유가 안되나요?



초과근무 사유가 됩니다. 즉 초과근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교사본연의 업무(수업, 상담 등)를 수행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초과근무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교장들이 초과근무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서 교사들의 초과근무를 사실상 제한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2022년 2분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초과근무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복무지침 개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복무관련 안내 (2022.06.28.)

담당 행정 업무 수행, 수업 준비, 시험문제 출제, 평가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신청-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함.



미처 기안을 못올리고 초과근무했는데 어찌죠?



정당한 초과근무가 확인된다면 **초과근무 한 다음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결재권자가 퇴근을 한 뒤라면, 일단 **NEIS에 기안**을 해 놓고 근무를 한 후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할 때 초과 근무대장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초과근무대장은 보통 당일 마감을 원칙으로 하니 이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날 교감 등 관리자와 소통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만 된다면 사후결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21쪽)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정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초과근무 2시간 신청하면 1시간은 왜 배나요?



1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은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으로 지급받으므로 제외하게 됩니다.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5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및 지급

-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분과 합산해 초과근무시간 산정
-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별도 명령 없이 월 1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초과근무할 때, 특근매식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규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는 **1식 8,000원 이내**의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16:30이 퇴근 시간인 경우, 17:30까지는 초과근무를 상신하지 않으므로 17:30 이후에도 근무하는 경우는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특근매식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61쪽)

○ 특근매식비

- 정규 근무시간 개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에 대한 매식비
- 1인당 1식 집행단가는 8,000원 이내



사전답사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출장비는 물론 초과근무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가능했지만 지침에 명기되지 않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이를 지침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은 이를 학교회계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61쪽)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①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교직원
(예: 사전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등)
- ②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하고
- ③ 초과 근무한 시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위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결보강/초과수업비가 학교마다 다른데, 기준이 뭔가요?



2022년 서울시교육청 기준은 ‘10,000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학교 예산 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2021년 4분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10,000원 이내’를
‘10,000원 **내외**’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고, 그 결과 상당수의 학교는 12,000
원 이상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에 따른 ‘**적정액**’ **책정**을 위해 전교조는 서울시교육
청과 지속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2023 학교회계지침
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결 및 초과수업에 대한 교육활동경비 운영지침 변경 (2021.12.)

- 대상 : 공/사립 유초중등교원 및 특수학교 교원

2021년까지 지침	2022년 지침
10,000원 이내	10,000원 내외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1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⑤ 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수업
수당을 단위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가족돌봄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가를 쓰라고 합니다.



자녀를 돌봐야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연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가족돌봄 휴가는 ‘특별휴가’로 분류되며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으나 2일까지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또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22.05.30. / 176쪽)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연가)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1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⑧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Q₁₄

방학 때 국외여행을 가려는데 연가를 쓰라고 합니다.

A

방학은 휴업일로서 연가를 내고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휴업일의 연가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교원은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을 활용**하여 국외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방학 중 공무외 국외여행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승인 절차가 다르니 복무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연가 또는 특별휴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연가 사유 기재 안함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국외자율연수 사유 로 계획서를 제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4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⑧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교원복무관련 안내 (2022.06.28.)

□ 휴업일 중 공무외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연가, 특별휴가 등)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기간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 절차 :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 또는 용무는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표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실시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기간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절차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사전승인 후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근무상황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유 또는 용무는 '국외자율연수'로 표시, 계획서를 파일로 첨부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다음 실시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활용할 경우, 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Q₁₅

연가의 기타인정사유로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A

2022년에 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업 일 중 연가를 쓰려면 1호~9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9호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사’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자대배치일, 결혼식 전일, 중고등학생 자녀 학교행사 참여, 친인척 경조사, 가족행사 등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이를 두고 학교장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연가를 신청하고 휴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수업일 중 연가 사유

- (제1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제2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제3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호)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제6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제7호)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제8호) 본인 자녀의 입영일
- (제9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가/특별휴가 때 대체강사를 요구했더니 거절합니다. 이건 교육청예산 아닌가요?



네. **대체강사비는 학교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입니다. 대체강사가 필요하면 학교에 요구하십시오.

시간강사는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보충을 위해 채용되는 강사(초중등교육법 제22조)로서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강사료에서 **1시간당 25,000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초 교육지원청에서 「보결대체 시간강사 수당 신청 안내 공문」이 오면, 절차에 따라 ‘대체강사 수당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체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학교 내 교원이 보결수업을 하게 되면 시간당 보결수당비(현재 10,000원 내외)를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022 공립학교/사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2)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강사료

가) 정규교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 결원보충의 시간강사 수당

슬기로운 교사생활 Q&A

Ⅱ. 복지

17. 학교를 잠시 벗어나 전문성을 신장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18. 번아웃된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19. 잠깐이라도 쉴 교사휴게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 교육활동 중 학생 사고 시, 교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21. 학생이 찬 공에 차가 파손됐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22.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나요?
23. 공무원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면데요?
24. 체육교사 피복비 지원이 매년 지급으로 바뀐 게 사실?
25. 신학년 준비연수에 참여하는 신규/복지교사는 열정페이?
26. 오늘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얼마 받나요?
27.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건가요?
28. 정년까지 일하면 공무원연금을 얼마 받나요?

Q 17

학교를 잠시 벗어나 전문성을 신장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단, 교직경력이 **유치원교사는 10년 이상, 초·중·고교사는 15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청 공문을 참고하세요.

2022 서울학습연구년(특별연수) 기본 계획(요약)

운영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대상 : 국·공·사립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수석교사 제외) 선발 인원 : 500명 내외(유아 3명, 초등 300명, 중등 200명) 연수 기간 : 2022.3.1. ~ 2023.2.28. 중 1학기 또는 2학기 6개월 파견 기관 : (유아)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초·중등)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연구, 학습 계획에 의한 연구 및 연수 추진 파견 기관 개설 연수 수강, 워크숍, 세미나, 기관탐방 등 다양한 연수 참여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국·공·사립의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교육실경력(모든 휴직,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 : (유아)10년 이상, (초·중등) 15년 이상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계속 실근무 (특수교육지원센터·위센터근무 경력 인정, 모든 휴직·파견 제외) 정년 잔여 5년 이상(1964.9.1.이후 출생자) 현장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 열의가 높은 교사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지급, 호봉 인정, 경력 인정 ※ 서울학습연구년(특별연수) 연수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선발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전형 : 적격 및 서류 심사 2차 전형 : 연구계획서 심사 1, 2차 전형 결과 총점 순으로 선발

○ 학습연구년 유형

유형		운영 기간 및 방법
A형	A형(1학기)	1학기(2022.3.1. ~ 2022.8.31), 6개월 특별연수
	A형(2학기)	2학기(2022.9.1. ~ 2023.2.28.), 6개월 특별연수
B형		1학기(6개월 특별연수) + 2학기(6개월 자율연수휴직)

※ B형은 1년(6개월 특별연수 + 6개월 자율연수휴직)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연수휴직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 특별연수 과정

특별연수명	파견기간
서울교육연구년제	1년
서울교대 파견	2년
교원대 파견	2년
서울대 파견	2년
수학·과학과 우수교사 국내대학 위탁특별연수	6개월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5조 【연구 환경 조성】

- ⑤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연구년제가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Q₁₈

번아웃된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힘든 학교생활로 인해 휴식이 절실한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자율연수 휴식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율연수 휴식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는 휴식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1년 이내(학기 단위 허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매뉴얼 (수정배부용 / 253쪽)

	초등	유아/중등
휴직 시작일	3월 1일, 9월 1일 모두 가능	3월 1일
해당학교 가능 인원	제한 없음	교원 정원의 5% 이내 ※소수점 첫째 자리서 반올림, 1명 미달 시 1명은 가능

전교조는 교육부와 의 교섭을 통해 실시 횟수 규정 확대(10년마다 1회씩)와 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쉴 교사 휴게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교조 단체협약에 의하여 **교사 휴게실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단위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남녀 교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휴게실 시설이 낙후되었다면 설비 수준을 향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31조 【교원의 후생복지】

- ① 교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냉·난방기를 비롯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여교사 휴게실에는 온돌 또는 침대를 구비하도록 지도한다.

‘숨’을 쉬는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사고 시 교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합니다.

만약 교사에게 민사 책임 등 법률적 소송이 발생했을 때는, 전교조 단체협약을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은 교육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1사고당 최대 2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29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2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 ⑦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학생이찬공에차가파손됐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가 아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임을 유의하세요.



상세답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내

○ 학교장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배상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보상한도

-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5억원 / 1사고당 20억원
-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천만원

Q₂₂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나요?

A

맞춤형복지 포인트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고, 복지점수 배정 기준은 경력과 가족 사항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과 개선사항 등은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금액 상향과 항목 조정 등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정책협의회 : 기본복지점수를 800포인트로 상향 요구)



서울시교육청 복지항목 안내

○ 복지항목 구성(기본항목+자율항목)

복지항목		구 성		비 고	
기본 항목	필수 기본	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항목		- 생명·상해보장보험 - [기본]5천만원 [선택]1억원/1억5천만원	
	선택 기본	기본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에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소속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 목	- 의료비 보장보험 - [기본]급여(3천만원) +비급여(3천만원)+특약 [면제]민간보험 가입 시 예외적 가입 면제	
		선택	개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	본인원일당 대상포진 진단비	일2만원 보상 1백만원
자율 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선(先)사용, 후(後)정산 ※ 전통시장상품권 포함	
※ 단체보험 보장기간 및 보험사 : 2022.1.1. ~ 2022.12.31. / 대표보험사 : 현대해상					
※ 2022년 단체보험 사전 선택 기간 내 미 선택 시, 기본보험 [생명·상해 5천만원 /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으로 자동선택					

○ 복지점수 배정

구분	기본 복지	변동복지											
		근속	가족					출산축하			〈2022년 신설〉		
											건강 검진	난임 지원	태아 산모 검진
			배우자	직계 존속	첫 째	둘 째	셋 째 이상	첫 째	둘 째	셋 째 이상	격년 제	해당자	
									1회	자녀당 1회			
복 지 점 수	700 일률 배정	최대 300 1년 근속당 10점	100	50	50	200	300	-	2,000	3,000	200	500	100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합하여 4인 초과 불가 ·단, 자녀는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가능 ·가족점수 배정 대상자는 반드시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점수 배정 가능 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 가족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2.1.1.~22.12.31.기간 동안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점수 차등 배정			1) 건강검진 ·개인의 건강검진 주기를 고려하여 연령 제한없이 격년제로 200점 ·주민등록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배정 2) 난임지원 ·22.1.1.~22.31.기간 동안 난임진단을 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시 1회에 한해 500점 (재직기간 중 1회) 3) 태아·산모검진 ·22.1.1.~22.31.기간 동안 임신 또는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시 자녀당 1회 100점		

○ 휴직 및 신분변동에 따른 복지항목별 월할 적용

월할 계산	월할 미 계산(해당 점수 전부 배정)
기본, 근속, 가족, 건강검진	출산축하, 난임, 태아·산모검진
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의 경우, 2022.1.1.~22.31. 사이에 사유 발생 건은 당해연도에 신청 및 사용이 원칙이나 복지수혜 기회 상실 방지를 위해 익년도(2023년)까지 신청 및 사용 인정 *단,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과년도 발생 건은 익년도 상반기에 신청 및 사용 장려	
※ 복지점수 1점은 1,000원(복지점수 부여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함) ※ 자율항목포인트 청구 기간 : 2022.3.1. ~ 2022.12.2. 까지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면데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청구시효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가족의 경우는 약 350만원 정도, 본인의 경우는 약 1천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사망조위금 안내



체육교사 피복비 지원이 매년 지급으로 바뀌었나요?



네. **1년에 1회(1인당 15만원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에 따른 2021년 3분기 정책협의회 결과, 2022 학교회계지침에 명기되었습니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3쪽)

2021년	2022년 (변경)
<p>○ 피복비</p> <p>해당학교 근무기간 중 2년에 1회 지급(1인당 20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담당 교원 : 체육복, 운동화, 모자 · 시설관리담당 당직전담원 및 미화원 : 작업(방한)복, 안전화 	<p>○ 피복비</p> <p>해당학교 근무기간 중 1년에 1회 지급(1인당 15만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담당 교원 : 체육복, 운동화, 모자 · 시설관리담당 당직전담원 및 미화원 : 작업(방한)복, 안전화



신학년 준비연수에 참여하는 신규/복직교사는 열정페이?



임용 전의 신규교사, 복직 예정교사, 채용예정 기간제교사들은 신학년 준비연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현재는 약간의 여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여비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은 2만원, 4**

시간 미만은 1만원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2021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2021년 1분기 정책협의회 결과로 신규/복직교사 연수 여비 지급을 2022년 학교회계 지침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문제제기가 이슈화되어, 일부 교육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교조의 요구가 2022년 2월 방송에 보도되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방송보도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190쪽)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의 연수(근무) 시 신규임용교사, 복직교사, 채용예정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에게 **여비 지급**



오늘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얼마 받나요?



본인이 받게될 연금 예상액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② 예상퇴직급여 조회 (예시 : 2006년발령, 28호봉)

예상퇴직급여

※ 아래 제시된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등)는 조회 시점의 개략적인 예상 금액으로 확정된 급여가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구시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시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청구시	
퇴직연금[매월]	1,306,180	퇴직연금일시금	93,405,330	퇴직연금(10년)[매월]	668,980
퇴직수당	26,185,160	퇴직수당	26,185,160	공제일시금	41,868,960
세 액	138,640	세 액	4,270,900	퇴직수당	26,185,160
(주1)지급액	26,046,520	(주1)지급액	115,319,590	세 액	1,136,800
				(주1)지급액	66,917,320

(주1) 기타 공제 전 금액입니다.

③ 예상 퇴직금 상세보기 (오늘 퇴직시 개시연령, 조기퇴직연금액)

연금지급 개시연령

개시연월1[오늘 날짜 퇴직시] 2040년03월 (61세) 지급사유 연도별지급개시-법률 13387호('16. 1. 1)

조기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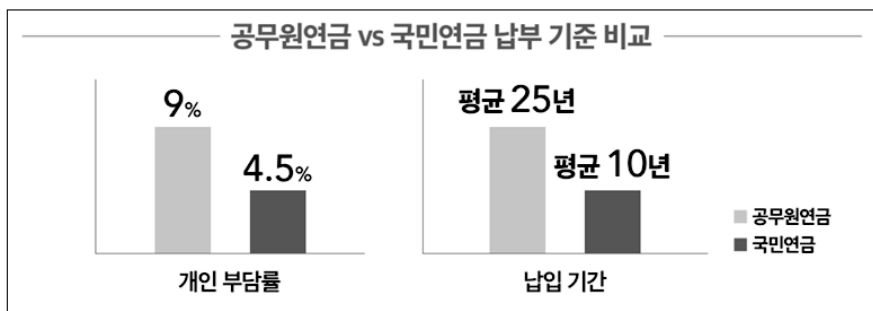
구분	1년이내 (95%)	1년초과~2년이내 (90%)	2년초과~3년이내 (85%)	3년초과~4년이내 (80%)	4년초과~5년이내 (75%)
연금월액	1,240,870	1,175,560	1,110,250	1,044,940	979,630
개시연월	2039년 03월 ~	2038년 03월 ~	2037년 03월 ~	2036년 03월 ~	2035년 03월 ~
개시연령	60세	59세	58세	57세	56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납입금액이 2배 많고 납입 기간도 길어서 발생하는 착시일** 뿐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공무원연금 1.48배 vs. 국민연금 1.5배)



① 납입 금액 2배

국민연금은 노동자가 4.5%를 납입하고 사업주가 4.5%를 납입. 반면 공무원 은 본봉의 9%를 납입하고 정부가 9%를 납입.

② 납부 기간 2.5배

공무원의 평균 납입기간은 25년으로 국민연금 평균 납입기간(10년)의 2.5배

③ 수익률 비교

공무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수령액은 10년 차의 경우 1.5배, 20년차의 경우 1.9배, 30년차의 경우 2.3배로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민간에 비해 손해가 큼. 전체 기간 수익률(수령액을 납부액으로 나눈 값)을 계산해도 공무원은 1.48배, 국민연금은 1.5배로 국민연금의 혜택이 더 큼.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

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월액	김교사의 공무원연금		김사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월)	수령액(월)	납부액(월)	수령액(월)
10년	350만	315,000	487,900	157,500	317,190
20년	450만	405,000	1,407,600	202,500	727,590
30년	550만	495,000	2,833,050	247,500	1,198,650

※ 2016년 첫 발령 후 재직 기간별 연금 수령액 가정(단위 : 원)

④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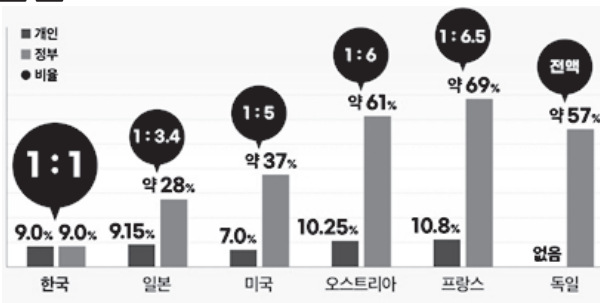
민간 기업은 매해 1개월분의 임금이 적립되어 퇴직금으로 지급.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 시 민간기업의 39%에 해당하는 퇴직 수당이 지급. 이로 인해 정부는 민간기업보다 3조원 가량의 비용을 적게 부담. 게다가 정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부담하지 않음.

⑤ 징계 시엔 연금 수령 불이익

공무원은 각종 제약과 의무가 많은데, 파면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이 1/2 삭감되기도 함. (민간은 그런 제약 없음)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
선진국보다 훨씬 낮아**



연금개약 리플렛



정년까지 일하면 공무원연금을 얼마 받나요?



공무원 연금액 계산식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액수는 개인별 적용 비율, 월급액, 물가상승률, 제도 변화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액 간단 계산식 (2015년 개정내용 적용 시)

① 보수기준액	×	② 재직기간	×	③ 재직기간별 적용율	×	④ 지급율
450만원	×	33년	×	101%	×	1.7%

매월 약 255만원 예상

※ 【비교】 2015년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을 시, 33년 근무 후 2022년 정년퇴임 시는 매월 약 320만원 수령 예상

① 보수기준액 (450만원)

현재가로 환산한 전생애 ‘평균’ 월급. 2022년 기준 전체 교원의 평균 호봉은 26호봉이므로 26호봉 기준으로 대략 계산.

② 재직기간 (33년)

2022년 기준 연금 납입 기간은 최대 33년. 향후 연금 납입 기간이 36년으로 늘어날 예정.

③ 재직기간별 적용률 (101%) ※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감소

0~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납입금만	82%	92%	101%

④ 지급율 (1.7%)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으로 2035년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 지급율을 적용받음. (2035년 이전 수령자는 1.9% 적용)



슬기로운 교사생활 Q&A

Ⅲ. 교권

29.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요.
30. 관리자가 폭언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갑질신고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31. '교사는 교장 명령을 따라야 한다'면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32. 관리자가 복장을 문제 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가요? 사례가 궁금해요.
34.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 학생 가방에 녹음기가 있네요. 불법 아닌가요?
36.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7.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38. 졸업앨범에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39. 제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40. 지문인식기 설치한다는데 지문등록을 안하고 싶어요.



갑질을 일삼는 관리자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요.



갑질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모아 **서울시교육청에 갑질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갑질의 사례를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8 교육부 7쪽)

○ 갑질 판단 기준

- 법령 등 위반 / 사적이익 요구 / 부당한 인사 / 부당한 민원응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 폭언 ·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기타) 따돌림, 부당한 차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등

갑질 신고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갑질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nogabjil@sen.go.kr)
- 국민권익위원회 갑질피해 신고
- 교육부 갑질 신고



관리자가 폭언을 해서 녹음을 했어요. 갑질신고 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심각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교사는 교장명령을 따라야한다’
면서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네,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복장을 문제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통해 ‘**자율적인 간편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경직된 사고에 갇혀 교사의 복장을 통제하려는 관리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 방안 (6쪽)

○ 캐주얼 복장 원칙

- 상가 조문 및 부득이한 의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인 간편복 착용을 원칙**으로 함
- 하계 업무 기간을 ‘반바지와 샌들’ 시즌으로 명명, 참여 홍보(매년 시행)
- 상급자부터 상징적으로 착용하여 확산 독려
- 냉난방기 적정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유연한 조직문화 개선

○ (적용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모든 기관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가요? 사례가 궁금해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상해와 폭행 / 협박 / 명예훼손과 모욕 / 손괴
성폭력 / 불법정보 유통 / 교육활동 침해

○ 교육청 책자에 나온 사례 중 일부 발췌

- 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교사에게 반항하면서 교사의 출석부나 서류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교사가 학교에서의 생활규정을 학생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이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학교에 게시 중인 생활규정에 대한 학교의 문서를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
- 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CCTV에 교사로부터 자녀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장면들이 CCTV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학부모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너(교사)는 수업할 자격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교사를 밀쳐 교사의 수업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녀의 수업 상황을 매 시간 보고하라고 연락하는 등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
-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켜라.”, “보호자 검토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라!”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주변 교원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있는 피해교원 필요 조치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는 변경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2년 개정판)

단계	피해교원 필요(대응) 조치
1	주변교원 또는 업무담당 교사에게 도움 요청
2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신고
3	필요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활용(1670-4972)
4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요청
5	사실확인서 작성, 피해 증거 제출
6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
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가능)



학생 가방에 녹음기가 있네요. 불법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인 학생이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이런 녹음이 아동학대(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는 추세이기도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사안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기준이나 지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낮은 편입니다.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적 다툼 및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사안 발생 즉시 전교조 조합원이라면 서울지부(☎02-523-1293)로 연락주십시오. **MOU를 맺고 있는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연결**해 드립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등이 요구하여 2022년부터 검찰,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선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수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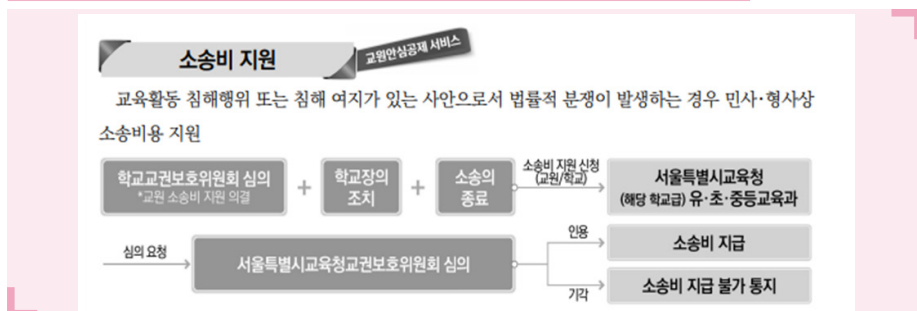
소송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교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 결정을 받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검찰, 경찰 **조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교원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소가 되어 민사, 형사 재판을 받을 경우 **1, 2, 3심 각 최대 55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 조합원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2년 71쪽)





졸업앨범에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네. 거부해도 됩니다.

교사의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졸업앨범에 실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2022.05. / 65쪽)

- 졸업앨범 제작 등은 이 법 제15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제작하여야 합니다.
- 또한 졸업앨범 제작은 학교별로 개인정보 포함여부, 제작방식 등 자율 선택 가능하며, 교사의 개인정보(사진 등)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등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제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민감정보는 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교사 업무용 안심번호 예산 등을 100만원 이내에서 학교예산에 편성**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에 요구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업무용 안심번호 지원계획 (2020.02. / 4쪽)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필요성 판단하여 공개 여부 판단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32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 ③ 교육청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사 업무용 안심번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또한 각급 학교운영비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동 내용을 명기한다.



지문인식기 설치한다는데 지문등록을 안하고 싶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체 인식(지문 등)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 등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문 미등록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기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카드, 수기장부 등)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문인식기 도입 시 교사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32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 운영하기 전에 교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카드, 수기장부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즐거로운 교사생활 Q&A

IV. 업무

41. 강사채용, 교사가 해야 하나요?
42. 강사 주휴수당 계산, 교사가 해야 하나요?
43. 학교시설물 관리, 교사가 해야 하나요?
44. 화장실 불법카메라 조사, 교사가 해야 하나요?
45. 교무행정지원사/교무실무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46.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을 학교장이 맘대로 뒤엎었어요.
47.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장은 당연히 교감선생님?
48. 작은 학교인데, 부장교사 수를 줄일 순 없나요?
49. 학급운영비를 쓸 때마다 기안해야 하나요?
50. 학급운영비를 개산급처리하면 편하다던데, 이게 뭔가요?
51. 청소비품, 시계, 거울 등을 학급운영비에서 사라고 합니다.
52. 학년/부서/교과협의회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53. 기초학력진단, 꼭 표준화도구로 해야 하나요?
54. 복수감독제, 꼭 해야 하나요?



강사채용, 교사가 해야 하나요?



강사채용은 교사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강사 선발 시 심사위원회 참여 등 협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강사 채용 시, **계획수립·수업 배치·복무 관리** 등은 **교감이 총괄하는 교육지원팀에서, 채용공고·임용·계약 등의 절차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 채용은 그 성격상 계약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계약 업무는 관직을 받은 회계 담당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교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전교조는 시설관리 및 강사채용, 각종 수당 관리 등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 학교업무 경감 추진 계획 안내 (11쪽)

- 교육지원팀은 교감, 비담임(교과) 교사, 교무행정지원사, 교육실무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운영
 - 시간강사, 협력 강사 등의 강사 채용 관련 수요 발생 시 계획 수립 · 수업 배치 · 복무 관리 등은 교육지원팀, 채용공고 · 임용 · 계약 등의 절차는 교육 행정팀 담당



강사 주휴수당 계산, 교사가 해야 하나요?



협력강사,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학교 내 인력의 관리 및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근본적으로 교사의 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인력 채용 및 계약, 각종 물품 품의 및 견적 요청, 각종 비용 수당 징수 및 환불, 물품 시설 관리 등의 업무는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보증보험에 가입되고, 관련 교육을 이수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Q₄₃

학교시설물 관리, 교사가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학교 시설물 관리는 교사의 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사의 임무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고, 행정직원 등 직원의 임무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인력 채용 및 계약, 각종 물품 품의 및 견적 요청, 각종 비용 수당 징수 및 환불, 물품 시설 관리 등의 업무**는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보증보험에 가입되고, 관련 교육을 이수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화장실 불법카메라 조사, 교사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화장실은 학교시설물인데 **시설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처럼 모든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는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1년 3분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하반기부터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은 교육지원청(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경찰서, 지자체(구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청공문 사례 (2022 남부교육지원청)

○ 2022 학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안내 및 협조요청

- 점검방법 : **외부전문 점검기관에서 학교 방문하여 점검** (2인 1조)
-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 지적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학교 방문 예정
- 학교 협조사항 : 점검업체 학교방문 시, 주차협조 및 학교배치도 제공 또는 점검장소 안내



교무행정지원사/교육실무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업무 지원 등**’으로 담당업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야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9.1.자)

○ 직종별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직종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	근무유형
교육실무사 [통합] (교무, 과학실험, 전산)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업무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교무행정 업무 지원) - 과학실험(과학 업무 지원) - 전산(전산 업무 지원) ○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하고, 전보시마다 업무분야가 변경됨 	방학중 비근무
교무행정지원사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업무 지원 등(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업무분야를 결정) 	방학중 비근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15조 【교원의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사(특수, 보건 포함)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무 행정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수업 및 생활지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한다.

상을 위한 교육





인사자문위원회 결정을 학교장이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시고 학교구성원과 공동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과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면, **학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된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9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생략)
- ② 교육청은 각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교감선생님?



아닙니다. 인사위원장은 교감이 한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교감이 인사위원장이거나 당연직 인사위원일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2022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의 교원인사위원회 세부 규정」 예시에 ‘**학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교사가 인사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여러 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공립학교 인사자문위원회와 달리 **심의기구**입니다. 의결기구처럼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학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려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기구 위상에 맞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

2021년 8월 개정되고, 2022년 3월에 발효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령으로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결산 등 대부분의 학교 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₄₈

작은 학교인데 부장교사수를 줄일 순 없나요?

A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장교사 배치 기준은 초중등 급별로 다르고, 학급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교육청은 매년 공문을 통해 교원 배치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니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로 조정해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 (2022년 기준 예시)

○ 초등학교

17학급 이하의 학교	5명 이내
18학급 이상 20학급 이하의 학교	6명 이내
21학급 이상 23학급 이하의 학교	7명 이내
24학급 이상 26학급 이하의 학교:	8명 이내
27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	9명 이내
30학급 이상 32학급 이하의 학교	10명 이내
33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	11명 이내
36학급 이상의 학교	12명 이내

○ 중고등학교

12학급 이하의 학교	9명 이내
13학급 이상 15학급 이하의 학교	10명 이내
16학급 이상의 학교	11명 이내

※ 단, 진로진학상담 부서에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음



학급운영비를 쓸 때마다 기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년초에 한 번 학급운영비 지출계획을 일괄기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행정실에서 카드를 수령해 사용하고, 카드반납 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62쪽)

○ 학급운영비

학급운영비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학급운영을 위해 **연간 사용할 금액을 일괄품의 후 학교카드 사용**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학급운영비 등 집행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2019)

- 학교회계 중 학급운영비, 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는 학기 초에 일괄 품의 후 학교카드로 집행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 누구나 쉽게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할 매뉴얼을 보급하여 회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① 「일괄 품의 후 카드결재」시 집행 방법

- 품의는 **1회로 종결**, 정산서 작성 부담 없음, 영수증 분실 우려 없음.



학급운영비를 개산급처리하면 편하다던데, 이게 뭔가요?



개산급은 학급운영비를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행정실에서 **학급운영비 총액을 담임교사 계좌에 입금하면** 담임은 필요할 때마다 **개인카드를 통해 지출하고, 연말에 영수증을 모아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62쪽)

○ 학급운영비

학급운영비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학급운동을 위해 **연간 사용할 금액을 일괄품의 후 학교카드 사용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학급운영비 등 집행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2019)

② 「개산급 지급」시 집행 방법 (요약)

- 개산급 요구(품의) : 학기초 1회 집행계획서 제출
- 행정실에서 담임교사에게 계좌입금 (학급운영비 전액)
- 담임은 교사개인 카드 사용 후 영수증 제출
(최종 집행 완료 후 영수증을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36조 【학급운영비】

- ① 학급운영비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학급당 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비품, 시계, 거울 등을 학급운영비에서 사라고 합니다.



청소도구, 학급에 비치해야 할 시계와 거울 등은 학급비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급운영비가 아닌 학교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내용 참고하셔서, ‘학급운영비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싶으니 학급비품은 학교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구입해 줄 것’을 학교에 요구하십시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62쪽)

○ 학급운영비

학급운영비는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학급운영을 위해 연간 사용할 금액을 일괄품의 후 학교카드 사용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청소도구 등 학급비품구입은 학교일반운영비에서 별도 편성)



학년/부서/교과협의회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협의회 건별로 일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연간 총액 기준이 아니라 실시할 때마다 일인당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학년협의회를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한다면 일인당 각각 3만원씩 총 6만원 예산 배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협의회, 교과협의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협의회비는 업무추진비에 속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3%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수립 시 이 한도 내에서 횟수나 액수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2022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 (63쪽)

○ 업무추진비

각급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의 지급기준은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한다.

(예) **교직원간담회, 교과협의회, 평가회, 부별협의회, 학년협의회, 행정실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기초학력진단, 꼭 표준화도구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사가 준비한 진단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의 시행령에서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



진단활동 예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와 단체협약에 따라 **학급별·교사별 진단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2022.03.25.시행)

제6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방법 등】

-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022년 서울 기초학력보장지원 시행 계획 (3쪽)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학교자체개발도구, 수업-관찰 및 상담 등 인지적 영역과 심리·정서적 영역을 포괄함. 기초학력진단활동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다중지원팀,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진단활동계획을 수립하되, **학급별·교사별 진단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교사별 진단도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진단활동 계획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 및 심의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20조 【교수·학습과정】

- ⑦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에 있어 표준화도구만을 강제하지 않으며, 학급별, 교사별 진단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복수감독제,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복수감독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고사 기간마다 학부모를 동원하여 부감독을 배치하거나, 학년별로 고사 시간표를 따로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별 특성이 다르고, 학교 상황도 다른데 복수감독제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감독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교육청은 2022년 8월 26일 공문을 통해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2022 2학기 중간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1쪽)

○ 지필평가 시행

- 감독관 배치 : 복수 감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고사실 운영,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복도 감독제 활용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슬기로운 교사생활 Q&A

V. 학교
운영

- 55. 교무회의에서 회의는 없고 업무 전달만 합니다.
문제 제기할 근거가 없을까요?
- 56. 교사 동의 없이 연구/시범학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 57. 학생에게 교무실청소를 시키면 안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58. 학생 이름표를 탈부착형 대신 고정형(박음질)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 59. 남학생 앞번호/여학생 뒷번호,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60. 학생용의복장 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무회의에서 회의는 없고 업무 전달만 합니다. 문제제기할 근거가 없을까요?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및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근거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에 따르면,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규정을 제정하고, 단순 정보전달형 회의를 지양하며,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단순 전달 중심의 회의 지양, 교육활동 중심 토론과 협의 문화 정착을 위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21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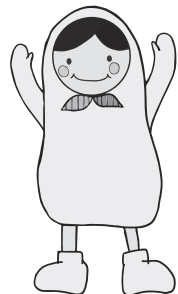
-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규정을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1.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회의규정을 준수한다.
 2. 단순 정보전달형 회의를 지양하고, 학교현안 문제와 교육주제 중심의 회의로 운영한다.
 3.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교무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포함한다.
 4.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단, 필요 시 재논의한다.

2022 학교업무 경감 추진 계획 안내 (13쪽)

바. 학교 내 각종 회의 규정 정비를 통한 회의 운영 효율화

-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중심으로 학교 내 교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일상적 소통과 민주적 협의가 가능한 회의 시스템 및 문화 조성
- 학교의 회의 체계, 회의 단위별 역할, 운영 주기를 포함한 학교별 교직원 회의 규정 제정
- 단순 전달 중심의 회의 지양, 회의 단위별 협의 주제 사전 공지로 교육활동 중심 토론과 협의 문화 정착

‘**쉴**’이 있는 배움





교사 동의없이 연구/시범학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의 동의 절차 없이 관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연구/시범학교를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과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연구/시범학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만약 교사들 동의 절차 없이 연구·시범학교를 신청했다면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전교조서울지부 단체협약

제7조 【연구학교】

- ③ 교육청은 연구·시범·교육실습협력학교 공모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하여 행정 조치한다.
 1. 연구·시범학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실습협력학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응모하며, 교원 동의율을 심사에 반영한다.

2022학년도 연구학교 공모 및 지정 계획 (2021.11.21.)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2021.9.1.자 교원 정원 기준(휴직자 제외) 1/2 이상의 교원이 연구학교 운영을 찬성한 학교



학생에게 교무실청소를 시키면 안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은 **청소용역을 학교 예산에 적극 편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주일에 1~2회 전문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교무실 청소를 맡겼더니, 학생이 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만족한다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맞는 단기용역비(시간, 적정 인원 고려)를 산정하여 학교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합니다.

전교조서울지부는 2021년 1분기 정책협의회, 2022년 2분기 정책협의회를 통해 청소미화원을 학교에 더 많이 배치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2022.02.08.)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교무실 뿐만 아니라 행정실, 회의실, 복사실 등 학생이 사용하지 않은 공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학생이름표를 탈부착형 대신 고정형(박음질)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네,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2021.03.25.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성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학교 밖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학생 이름표가 고정식으로 되어있다면 탈부착 이름표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14조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2019.11.)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고정명찰은 학교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을 공개하게 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함.

명찰 제도 개선 안내 (2015.12.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명찰은 탈부착식 혹은 목걸이식 카드(학생증, 대출증 겸용 등), 고정식으로 하되 주머니 속에 넣고 뺄 수 있는 방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남학생 앞번호/여학생 뒷번호,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남학생이 뒷번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녀 통합하여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성평등 현황조사 (서울시교육청)

○ 출석번호 부여방식 (1,292개교 답변)

	성별분리	가나다순
초등학교	44%	55%
중 학교	12%	87%
고등학교	10%	86%

일부 학교에서는 성별 분리를 하되 해마다 남녀 순서를 바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차별적 관행을 벗어나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학생용의복장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용의복장 규정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1 학교규칙운영매뉴얼 개정판

절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토론회 개최
	시안 마련	▶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안 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3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전교조와 함께 해주세요

교사로서 권리를 찾고 싶은 선생님
삶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참여는
우리 교육과 사회를 바꾸고
더욱 **튼튼하고 풍성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하기



튼튼한 버팀목 ‘교권지원센터’

전국공통
전화상담



전교조 교권상담
1670-7440

카카오톡
채팅상담



온라인 교권상담실 운영
#교권 #교권상담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ktuseoul@gmail.com